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10] 동아시아에서의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의 전환 과제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공석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25 시리즈기획

풀뿌리 세계시민을 만나다

- [1] 풀뿌리 세계시민은 누구인가?
- [2] '에코 투어리즘'이다
- [3] 선진국은 사회혁신을 이룬 농업국이다
- [4] 가벼운 만남에서 공동체가 시작된다
- [5]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1
- [6] 마을공동체의 미래는 돌봄 민주주의다 2
- [7] 지역 애착과 관계적 돌봄이 청년을 지역으로 부른다!
- [8] 사회적 가치를 먹고 사는 시니어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다
- [9] 마을교육 공동체가 거버넌스 리빙랩이다
- [10] 동아시아에서의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서의 전환 과제

이번 호는 지금까지의 '풀뿌리 세계시민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안팎의 위기 속에서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의 전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들은 시리즈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의 지역 현장을 돌봄 민주주의, 생태적 연대, 가벼운 공동체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성의 재구성' 과정을 추적하였다.

신자유주의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고립, 돌봄의 붕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풀뿌리 세계시민은 민주주의, 생태 회복, 지역 혁신, 돌봄, 교육을 다시 엮어내며 새로운 시민성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풀뿌리 세계시민과의 만남과 대담을 통해 그들의 언어와 실천 과정은 단순한 지역 운동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가 공통으로 마주한 절체절명의 도전 과제이자 문명사적 전환의 징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시민성의 재구성

21세기 들어 인류는 인구 감소, 초고령화, 디지털 전환, 지역 불균형, 정치적 양극화, 외로움의 습격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심층에는 시민성의 붕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초국적 자본가계급과 플랫폼 경제는 인간의 삶을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재편하고 시민적 연대와 공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들은 '풀뿌리 세계시민주의'^{Rooted Cosmopolitan}

Citizenship' 개념을 주목하였다. 이는 세계시민주의의 보편적 이상을 지역의 실천적 맥락 속에서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이며 '로커벌'^{locabal} 한 시민성의 회복이다. 동아시아 사회 역시 디지털 전환과 초고령화, 지역소멸, 플랫폼 자본주의의 결합이라는 복합적 위기와 도전 속에서 다양한 가치 속에서 갈등과 경쟁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감시 자본주의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AI의 부상은 일상의 모든 행위를 '데이터화'^{datafication} 하며 시민의 삶을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종속시키고 있다. 쇼핑, 의료, 금융, 행정, 교통, 심지어 돌봄까지 '데이터 기반 효율성'의 이름으로 플랫폼화되고 그 결과 개인의 행동과 관계는 끊임없이 추적, 평가, 추천된다.

주보프^{Zuboff}(2019)가 말한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는 이제 도시의 스마트시티, 농촌의 디지털 행정, 복지와 교육 서비스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시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안전 시스템이 시민의 이동과 소비를 추적하고, 농촌에서는 드론과 센서가 농업을 자동화하는 대신 지역 주민의 노동과 경험을 '데이터 자원'으로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알고크라시'^{algorithmic}, 즉 알고리즘에 의한 통치 체제는 인간의 판단과 신뢰를 대체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숙의와 관계를 침식시키고 있다.

둘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구조의 급변은 동아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2024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일본은 이미 '초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대만과 한국은 2030년대 초반이면 인구 자연감소의 가속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농촌 지역의 학교는 폐교되고 버스가 끊긴 마을이 늘어나며 돌봄과 의료의 공

백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줄어드는 반면, 돌봄·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소멸'^{local extinction}이라는 용어가 일본을 넘어 한국·대만에서도 공통어로 쓰이게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효율성의 급속한 확산과 지역의 사회적 기반 붕괴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인간의 존엄과 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도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고, 농촌은 인구 감소와 돌봄 공백으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있다. 결국,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시민은 '관리되는 존재'로 전락하며,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효율'의 이름으로 공공영역의 가치와 돌봄을 민영화해 왔다. 디지털 자본주의는 이를 한층 강화하며, 시민을 연결하는 대신 데이터로 분절된 개체^{individualized data subjects}로 만든다. 이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로 남고, 공동체적 신뢰와 윤리적 관계는 빠르게 소멸한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데이터로서의 인간'과 '소멸하는 마을' 사이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인간적 관계의 회복, 돌봄의 윤리, 장소 기반의 연대가 더 이상 복지나 환경운동의 하위 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재생의 근본 조건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 양천구 오목 공원 모습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풀뿌리 세계시민성이다. 이는 세계화의 논리를 거부하거나 지역에만 머무르는 태도가 아니라 지구적 감수성과 지역적 실천을 결합한 ‘글로컬^{global}’ 시민성의 회복이다. 필자들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풀뿌리 세계시민은 감시 자본주의와 알고크라시에 맞서 관계와 돌봄을 회복하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생태적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2. 돌봄 민주주의와 가벼운 공동체: 분석 틀

돌봄 민주주의의 회복

트론토^{Toronto}(2013)의 돌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는 민주주의를 돌봄의 윤리와 연결한다. 그녀는 돌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책임의 정치임을 강조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직시할 때 국가 복지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본 시가현 에이겐지의 의료·돌봄 리빙랩은 지역 주민이 ‘모두의 돌봄^{All-Community Care}’을 설계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주목된다. 이처럼 돌봄 민주주의는 관계적 정의를 향한 정치적 전환을 강조한다. 돌봄^{care}은 더 이상 사적인 덕목이나 복지 서비스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트론토가 제시한 것처럼 돌봄 민주주의는 돌봄을 사회의 도덕적 토대이자 정치적 구조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

주지하듯 민주주의란 단지 선거와 제도적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시민 역량, 즉 접촉 능력^{hapticality}을 제고하는 실천 과정이다.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는 시민이 서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 취약함 속에서 책임과 신뢰를 조직하는 사

회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율이 아니라 상호 의존의 정치에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 개념은 더욱 생생한 의미가 있다. 한국·일본·대만의 공동체는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시장화된 복지 체계 속에서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공백은 단지 인력 부족이나 예산 문제를 넘어, 시민의 신뢰와 관계가 해체된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돌봄 민주주의는 제도 개혁 이전에 시민이 서로를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성 회복’의 정치 과정이다. 이를 현실에 연결하는 구체적 실천은 ‘지역 돌봄 생태계’의 구축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한 두란(대만), 에이겐지(일본), 여의도 샛강(한국) 사례를 통해 우리는 지역 주민이 의료진, 학교, 자원봉사자와 함께 돌봄의 주체로 나설 때 민주주의는 다시 생활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을 목도하였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들은 돌봄은 더 이상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라 “시민이 서로를 책임지는 상호 신뢰와 협동의 실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벼운 공동체 전략

만치니^{Manzini}(2015)가 제안한 ‘가벼운 공동체^{light community}’는 느슨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망에 기초한다.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한 한국 춘천의 별빛협동조합이나 일본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 마루고토 컬리지는 이 가벼운 연대를 통해 세대와 지역, 도시와 농촌을 연결한다.

가벼운 공동체는 들고 나는 것이 더욱 자유롭고 유연한 관계를 지향하기에 끈끈한 밀착이 아닌 신뢰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앞서 제시한 돌봄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의 ‘정치적 실천’을 강조한다면, 가벼운 공동체는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사회적 형식’을 의미한다. 즉 서로의 관계를 통한 지나친 유대감과 폐쇄성에 매몰되지 않고 상호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벼운’ 공동체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다.

전통적 공동체가 ‘혈연·지연·의무’에 기반했다면, 가벼운 공동체는 ‘공감·참여·선택적 혹은 느슨한 유대’에 기반한다. 이는 개인의 이동성과 다양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느슨함’이라는 역설적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는 짧고 느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그 관계는 신뢰할 수 있으며, 이 관계망이 지역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된 동아시아의 풀뿌리 현장에서 가벼운 공동체 실험은 이미 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가미야마 마루고토 칼리지와 춘천 별빛협동조합은 프로젝트 중심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주민·청년·시니어가 유동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협력한다. 이들은 공동체를 ‘영구적 소속’이 아니라 ‘공유의 리듬^{shared rhythm}’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공감과 공유의 리듬 속에서 서로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흠뻑이며 그 과정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한다.

가벼운 공동체의 핵심은 ‘관계의 인프라’를 재디자인하는 것이다. 즉, 제도나 법률보다도 더 근본적인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험을 주목하는 것이다. 공유 주방, 커뮤니티 카페, 로컬 마켓, 타임 크레딧^{time credit}, 돌봄 정례 모임과 같은 미시적 장치들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촘촘한 회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가벼운 연결’은 구체적 장소를 중심으로 정서와 공감에 기초한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운 연결’은 구체적 장소를 중심으로 정서와 공감에 기초한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돌봄 민주주의와 가벼운 공동체의 결합: 지역 회복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 두 개념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분석 틀이 아니라, 지역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양 날개와 같다. 돌봄 민주주의가 “무엇을 위해 함께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면, 가벼운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실행 구조를 제시한다. 필자들은 이 두 개념의 결합 시너지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응 과정으로 해석한다.

차원	기존 구조	돌봄 민주주의 & 가벼운 공동체 결합
시민성	개인적 권리 중심	관계적 책임과 상호 의존 중심
정치	제도·투표 중심	생활 정치·감정 정치의 확장
경제	성장·경쟁·효율	돌봄·순환·공유 가치 중심
사회조직	위계적·폐쇄적	느슨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지식과 학습	학교·전문가 중심	마을·시민·현장 기반 학습

필자들은 동아시아 현장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은 ‘관계의 리듬’과 ‘삶의 감정’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의 질과 존엄의 가치를 우선시



춘천 의암호 모습

함을 목도하였다. 예를 들어, 두란의 재택 의료, 한강의 생태 시민운동, 가미야마의 교육실험은 돌봄이 단순한 노인 돌봄을 넘어서 육아 돌봄에서 교육과 진로를 포함하는 생애 주기적 과정이고, 이것이 다양한 주제와 결합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디지털혁명과 AI 부상을 통해 속도와 효율로 대표되는 현대의 알고크라시^{algocracy}에 대한 문명적 대항 선언이기도 했다.

이런 견지에서 필자들은 돌봄 민주주의가 인간적 리듬을 회복하고, 가벼운 공동체가 그 리듬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준다면, 동아시아의 풀뿌리 세계 시민은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 경제, 감시 자본주의, 인구 소멸의 시대 속에서도 돌봄과 연대에 기반한 문명 전환의 주체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동아시아 지역의 풀뿌리 세계시민들

한국의 풀뿌리 세계시민: 생태·농촌·교육·돌봄의 민주주의

첫째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조은미 이사장은 한강을 ‘시민의 강’으로 되살리는 일을 10년 넘게 지속해 왔다. 그녀는 “강을 보호하는 일은 환경운동을 넘어서 시민성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강을 돌보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강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나무를 심으며 웃을 때 우리는 공동체의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홍보보다 ‘현장의 만남’을 중시한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감정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강공원 걷기를 통해 물속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셋강 지기 김명숙 시니어 활동가는 은퇴 후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한다. “평생 전업 주부로 가

족을 돌보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만 배웠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함께 돌보는 삶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셋강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고 셋강을 사랑하는 수많은 생태 시민을 만나며 이른바 가벼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애착에 기초한 생태 보전 활동을 통해 그녀는 스스로 생태적 감수성을 갖추면서 풀뿌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원주에서 풀뿌리 금융 돌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김선기 국장은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순환 고리”임을 강조한다.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에 의존하는 시니어 빈곤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조합 참여를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 간의 상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이 두 사례는 시니어의 돌봄 참여가 지역 회복력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

셋째 임실의 김정흠 기초의원장은 시민운동가에서 농민, 그리고 지방의회 진출하면서 풀뿌리의 다양한 의제와 요구를 제도 정치를 통해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풀뿌리민주주의는 현장에서 토론하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한다. “농민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



안성 다문화 활동 참여자와 함께

스로 혁신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정치도 현장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의 말은 한국의 농정 개혁과 사회적 농업 실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사실 선진국은 삼농 정치에서 사회혁신을 이뤄가는 농업국임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홍성군의 평민학교 실험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결합을 보여준다. 홍성군 장곡면 평민학교 사례는 ‘마을 전체가 학교’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이 교사, 학생, 행정가의 경계를 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장민철 평민학교 교문은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배우는 일이다. 이 배움이 정치이고 교육이 돌봄”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돌봄 민주주의가 생활 정치 실험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풀뿌리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돌봄과 가벼운 공동체 실험을 통해 풀뿌리 세계시민이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중이다.

일본의 풀뿌리 세계시민: 농촌 사회 혁신·돌봄·생태·교육의 민주주의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가초^{上勝町}, 가미야마^{神山町}, 시가현 에이겐지^{永源寺}, 군마현 다테바야시^{館林}, 도야마현의 가미이치^{上市町} 등에서 만난 풀뿌리 세계시민은 농촌의 초



에이겐지 마을 모습

고령화, 지역소멸 그리고 관계 단절에 대응하면서도 생태, 돌봄, 학습, 연대라는 글로벌 의제를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데 분투 중이다.

일본의 농촌은 오랫동안 ‘쇠퇴’와 ‘소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여 년 넘게 도쿠시마·시가·군마현 등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미래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변인이 아니라 문명 전환의 실험실로서 돌봄·생태·교육·연대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고 있다. 필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은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자부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삶 속에서 풀뿌리 세계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농촌 지역의 ‘작은 혁신의 실험실’로서 가미야마^{神山町} 사례는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다. 인구 5000명의 이 마을은 ‘소멸’의 위기를 디지털과 문화로 전환했다. 폐가를 개조해 ‘창의적 거버넌스’를 실현했고, 로컬 카페, 리빙 랩, 지역대학 ‘가미야마 마루고토 컬리지^{Kamiyama Marugoto College}’ (KMC)를 통해 젊은 세대와 도시의 창작자들을 끌어들었다.

KMC 교수로 참여하고 있는 사노 준야 교수는 “세계와 경쟁할 인재가 아니라 마을에서 세계를 상상할 인재를 키우는 것, 그것이 KMC의 교육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세계시민’은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초국적 계급의 엘리트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세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청년들이 배우는 것은 코딩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함께 밥을 짓고, 회의를 열고, 지역의 농민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농촌형 사회혁신은 지역을 단순한 낙후지가가 아니라 ‘문명의 접속점^{civilizational interface}’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KMC는 아직 입학하는 학생들만 있고 졸업생이 없는 상태이다. 졸업생이 나오는 2029년부터 그들의 삶이 과연 풀뿌리 세계시민을 지향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둘째 돌봄 민주주의, 즉 ‘모두의 건강을 위한 모두의 책

임'을 강조하는 시가현 에이겐지^{永源寺}의 의료·돌봄 실험 역시 주목된다. 에이겐지 클리닉 하나토 박사^{Dr. Takashi Hanato}는 에이겐지 실험을 '올-커뮤니티 케어^{All-Community Care}'로 부른다. 그는 "내 전공은 내과도, 가정의학도, 소아청소년과도 아닌 에이겐지 커뮤니티"라고 웃으며 답하지만 그의 답에는 지역 돌봄의 핵심이 녹아져 있다. 지역 돌봄은 의료·간호·요양·이웃·행정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생태계이기에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계성이 구축될 때 돌봄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에이겐지 클리닉은 단순한 환자 돌봄을 넘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병동이 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그의 철학은 트론토^{J. Toronto}의 '돌봄 민주주의'와 깊이 맞아 있다. 그는 의료를 '관계성의 기술'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즉,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관계망 자체를 돌보는 일이다. 의료진은 전문가이자 조율자이며, 지역 주민은 환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예컨대, 에이겐지의 회의 구조는 수평적이다. 병원, 복지시설, 시민단체, 학교, 상점, 마을 리더가 매월 함께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수평적 돌봄 거버넌스는 국가 복지의 관료적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돌봄이 곧 정치이고 돌봄의 관계가 곧 시민성의 기반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생태 보전을 위한 '쓰레기 무배출^{Zero Waste}' 실천은 일이 관계를 만드는 사례로 주목된다. 도쿠시마현 가미가츠^{上勝町}는 2003년 일본 최초로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였다. 이 운동을 주도한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마 테루미^{東 輝実}는 쓰레기 분리배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단순히 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한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녀는 카페 '폴스타^{Polestar}'를 열어서 친환경 메뉴와 지

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가미가츠 생태계를 사랑하는 관광객, 주민, 행정이 만나 함께 궁리하는 정책 상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태 보전 정책이 곧 가벼운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관계성 회복 정책이 되는 셈이다.

사실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곧 사람들의 습관과 감정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 마을에서는 쓰레기 분류소가 일종의 '공공영역' 역할을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분리배출을 돕고 또한 그들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관계성을 유지한다. 재활용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함께 스태프들과 재활용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단기 혹은 장기 체류 관광객은 재활용 센터 옆 숙소에서 머물면서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생태 문화를 배운다. 이러한 생태 시민성을 갖춘 주민은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가벼운 공동체를 이뤄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넷째 배움과 전통을 창의적 교육으로 계승하는 군마현 다테바야시^{館林}의 '츠무기 프로젝트^{Tsumugi Project}'는 교육을 '삶의 공유 과정'으로 주목된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노리코 야수라오카^{安楽岡 紀子} 대표는 '가르치는 학교' 대신 '함께 배우는 마을'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마을의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이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지역 축제를 기획한다. 프로젝트 이름 '츠무기^紬'는 일본어로 '실을 잣다'는 뜻이다.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문화의 실을 엮어 새로운 공동체의 옷감을 짜고 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짜는 행위이자 돌봄의 기술로 전환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가미야마 마루고토 칼리지(KMC)와 연결되어 '지역에서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생들은 농사와 디자인, 마을 행정, 예술, 돌봄의 프로젝트를 넘나들며 '지속 가능한 마을의 기술^{arts of living together}'을 배운다. KMC의 목표는 지역과 세계를 함

게 상상할 수 있는 인재이며 풀뿌리 세계시민은 바로 마을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흥미롭게도 2024년 가을에 문을 와카야마현의 우츠호 Utsuho 아카데미 실험에서도 발견된다. 교코 센고쿠 仙石 恭子

이사장은 풀뿌리 지역과 세계를 잇는 풀뿌리 세계시민을 기르기 위해 마을을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농촌 혁신은 '거대한 변혁'이 아니라 관계의 리듬을 바꾸는 느린 혁신 slow innovation을 보여준다. 가미야마의 KMC, 에이겐지의 커뮤니티 돌봄, 가미가츠의 제로웨이스트, 다테바야시의 지역 혁신, 그리고 우츠호 아카데미의 실험은 각각 다른 분야의 실험이지만 공통의 언어를 공유한다. 그것은 바로 돌봄의 민주주의와 가벼운 공동체의 결합이다.

이들은 강한 유대나 중앙집중형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느슨하지만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시민의 신뢰와 책임을 회복한다. 특히 필자들이 만난 풀뿌리 세계시민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생태·돌봄·연대·학습-을 지역

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한 도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을에서 세계를 다시 짜는 사람들이다.

대만의 풀뿌리 세계시민: 타이둥 두란에서 배우는 돌봄 민주주의

대만 타이둥의 작은 해안 마을, 두란 都蘭은 동아시아 돌봄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 불릴 만하다. 이곳에서는 의사 위상루 余尚儒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재택 의료, 이동 진료 클리닉이 중심이 되어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과 예술가, 원주민과 도시 청년이 서로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의 따뜻한 실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나 복지 제도 이상의 시민적 상상력과 관계적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란의 돌봄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는 교육공동체, 생태 돌봄, 그리고 가벼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타이둥 두란마을 전경

두란 지역 주민의 돌봄은 자연과 관계성이 함께 치유되는 삶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두란의 돌봄은 의료적 처방을 넘어선다. 두란 홈 클리닉은 환자를 병원으로 부르는 대신 의료를 일상의 풍경 속으로 가져온다. 방문 진료를 통해 위상루 선생은 환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아픔의 원인’을 단지 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찾는다. 이 과정은 ‘정서적 회복’을 돌봄의 일부로 포함하며 돌봄을 관계적·생태적 치유로 재정의한다.

또한 두란 홈 클리닉은 가벼운 공동체 즉 느슨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힘을 강조한다. 두란의 돌봄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망이 ‘가볍지만 오래가는’ 공동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카페, 식당, 예술 공간은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니다. 그곳은 돌봄에 관한 소식을 서로 나누며,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두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란 지역 내 돌봄 사업 참여자 월례 회의가 주목된다. 의료진, 행정관, 자원봉사자, 돌봄 운전자 등이 지역 어르신의 돌봄 사례와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궁리한다. 아직 의사 위상루 1인의 역할이 중심에 있지만, 그 역할을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조금씩 분산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두란 사례는 돌봄을 단순히 제도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돌봄 정책과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구현 과정을 보여준다. 의료진은 행정의 하청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료’로, 주민은 복지혜자가 아니라 ‘공동의 설계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생태계가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생태·공동체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상루 선생 같은 풀뿌리 세계시민성을 갖춘 지역의 일꾼이 아래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4. 동아시아 지역 풀뿌리 세계시민의 특징

이제 이번 시리즈를 통해 소개한 풀뿌리 세계시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동아시아 맥락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역할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첫째 풀뿌리 세계시민은 자기가 속한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시민성을 보인다. 이들은 거대한 이념이나 운동에서 출발하지 않고 자신이 발 딛고 사는 마을과 관계망 위에서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궁리하고 실마리를 찾아가는 동안 세계적 감수성을 갖춘다. 다시 말하자면,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계시민성’을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둘째 풀뿌리 세계시민은 돌봄을 일상의 정치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돌봄을 사적인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공선으로 재위치 시키며 이를 일상적 만남을 통해 돌봄 활동을 시작하며 그 관계성에 기초해 교육과 연대의 방식으로 돌봄을 구현한다. 이처럼 풀뿌리 세계시민은 돌봄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회복력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풀뿌리 세계시민은 생태적 감수성과 생활 속 실천을 결합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재난을 단순히 담론 수준에서 풀어가기보다 ‘삶의 현장’ 속에서 생태 보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회복한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여의도 샛강, 가미이치의 들판, 가미야마와 가미가초의 산과 강, 장곡면의 농장, 그리고 두란의 생태 자원을 “관계적 자원”으로 전환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애착은 더욱 높아지고 주민 간의 신뢰와 협동 역시 강화된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이론으로 무장한 활동가가 아니라, 지역 애착과 관계성의 옷을 입고 수평적이고 열린 협동을 지향하는 지역 주민이요 시민인 것이다.

넷째 풀뿌리 세계시민은 ‘경청과 느린’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서두르지 않고 위계 없이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 함께 ‘배움’을 선택한다.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풀

뿌리 세계시민은 경청과 존중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텃세는 줄어듦과 환대는 늘어나야 한다. 에이겐지와 두란 지역의 돌봄 생태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더욱 열린 자세로 이주민을 환대해야 한다. 경청·대화·합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형식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존립의 조건임을 주목해야 한다.

다섯째 풀뿌리 세계시민은 디지털 플랫폼 자본주의에 종속되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함께 공리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빅 테크가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AI를 비판 없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축적과 공유에 있어서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혁명을 통해 정보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의료 관련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게 바이오테크로 집중되는 상업화의 위험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풀뿌리 세계시민은 돌봄 과정에서 시니어,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처럼 풀뿌리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세계시민은 미시와 거시의 연결 즉, 지역성을 '로컬발^{Localbal} 연대'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소개한 사례를 보면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역에 뿌리내리되 지역에 갇히지 않는다. 일본-대만-한국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풀뿌리 세계시민은 교육, 생태, 돌봄, 농촌 지역 혁신 등에서 발굴 및 축적한 경험을 교류할 때이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나는 마을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다”라는 실존적 확신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전환 즉 '지방에서 세계를 다시 상상하는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더 이상 국경 없는 초국적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와 끊임없이

이 연결하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5. 돌봄과 연대, 그리고 문명 전환을 위한 풀뿌리 세계 시민의 역할

동아시아의 풀뿌리 세계시민들은 단순한 지역 운동가나 생활협동조합원이 아니다. 그들은 돌봄^{care}과 연대^{solidarity}를 토대로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문명 전환을 촉진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 활동가이다. 이들의 실천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이후,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의 전환을 꿈꾼다.

첫째 풀뿌리 세계시민에게 돌봄은 단순한 복지의 한 영역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공간이자 기회이다. 조은미 한강 협동조합 이사장이 말했듯이 “강을 돌보는 일은 곧 시민성을 되찾는 과정”이며, 김명숙과 김선기의 사례처럼 돌봄은 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천이다.

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수혜자를 수동적 위치에 머물기보다는 돌봄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계적 돌봄은 트론토가 말한 '공동의 책임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돌봄의 정치^{care politics}'를 통해 시민사회의 새로운 윤리를 정립한다(Tronto 2013).

돌봄 영역에서 풀뿌리 세계시민이 보여준 두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공간적 돌봄 즉 한강, 샛강, 마을, 농촌, 해변 마을 등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를 기반으로 생태적 감수성과 애착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관계적 돌봄은 세대, 계층, 국적을 초월해 상호 신뢰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개인을 외로운 개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다.

둘째 풀뿌리 세계시민은 '지구적' 연대를 추상적 구호가 아닌 생활 속의 실천으로 구체화한다. 한강의 생태 시

민, 가미야마의 청년교육, 두란의 공동체 돌봄 의료는 서로 다른 맥락이지만 모두 '지역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상호 순환의 구조를 갖는다.

그들의 연대는 네 가지 형태를 보인다. 돌봄의 연대는 노인·이주민·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부조의 실천 과정이다. 학습의 연대는 마을 학교, 지역대학, 협동조합을 통한 집단지성의 형성 과정이다. 생태의 연대는 지역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간-자연-비인간 간의 관계 회복을 지향한다. 문화의 연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축제, 예술, 공동 작업을 통한 기억과 감정의 공유를 통한 공감을 회복한다.

이처럼 연대는 제도적 협약보다 느슨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풀뿌리 지역을 넘어 국가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 연계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풀뿌리 세계시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관계성 회복'의 실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는 단지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지역소멸이 아니다. 그것은 근대문명의 한계, 즉 성장·경쟁·분리의 논리에 대한 총체적 위기이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이에 맞서 풀뿌리 세계시민은 '돌봄과 연대의 윤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적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세계시민의 실천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재정·제도 기반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학습 인프라의 강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추상적인 시민교육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 장소인 마을에서 배우는 풀뿌리 세계시민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아래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관계적 접촉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지식 정보화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넷째 동아시아적 연대의 제도화 즉, 국경을 넘어 풀뿌리

리 조직 간의 교류와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컨대 돌봄과 연대로부터 출발한 풀뿌리 세계시민으로의 전환 과제는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시민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풀뿌리 세계시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변인이 아니라 문명 전환 리빙 랩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다양한 사례는 모두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조하려는" 풀뿌리 세계시민의 집합적 노력이다. 필자들은 결국 동아시아의 문명 전환은 거대 담론이나 기술혁신이 아니라 작은 돌봄과 연대의 실천이 서로를 이어주는 힘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전망한다. 이것이 풀뿌리 세계시민이 이 시대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끝>

사진=공석기 제공

참고문헌

- 공석기·정수복·임현진 (2023).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는 있는가: 성찰적 비판과 실천적 과제」, 진인진.
- 공석기·임현진 (2020). 「마을에 해답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 되찾기」, 진인진.
- 공석기·임현진 (2017). 「주민과 시민 사이: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적경제활동 돌아보기」, 진인진.
- Danaher, J. (2019). *Automation and Utopi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nzini, E. (2015). *Design, When Everybody Designs*. MIT Press.
- Scholte, J. A. (2020).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Tronto, J.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YU Press.
- Zuboff, S. (2019).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Public Affairs.